

면세 사업자 157만명, 내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수입 신고

국세청, 대상자 157만명에게 18일 안내장 발송
비대면 디지털 신고 권장...홈택스·손택스 이용
주택 임대 사업자, 달라진 세법 사항 확인해야
의사·약사는 수입 미신고·과소 신고 시 가산세

병·의원, 학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는 '2020년 귀속분 수입'을 포함한 사업장 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면세 사업자

현황 신고 대상자 157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60세 미만 납세자에게는 모바일로, 그 외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냈다.
모바일 안내문은 홈택스 웹사이트

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전자 신고를 권했다.
홈택스에서는 '신고/납부' 일반 신고→사업장 현황 신고 경로를 접속하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전자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편의 기능을 새롭게 마련했다.
우선 작년까지 '무실적 신고'에만 가능했던 모바일 신고를 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단, 의료업·주택 임대업 등 수입 검토표 작성 항목이 많은 업종은 제외했다.

수입 등 임대 현황이 전년과 동일한 주택 임대 사업자는 간편 신고서 제출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주택 임대 사업자가 수입 검토표 작성 시 '보유 주택 불러오기' 기능을 추가해 편의성을 높였다.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사업장 현황 신고 작성 동영상'을 모바일로 신규 제공한다. 이 동영상은 국세청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에서 시청할 수 있다.
부득이 전자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서면 신고서(경로는 '국세 신고 안내' 개인 신고 안내→사업장 현황 신고→ 수입 검토표 작성 항목)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2월10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까지 접수한다.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주택 임대 사업자의 경우 2020년 귀속 세법 개정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정기 예금 이자율이 1.8%(2019년 귀속 2.1%)로 하향했다.
공동 소유 주택 소유 지분 보유자의 연 수입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수 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된다.

다만 동일한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된 경우에는 남편·아내 중 1인 소유로 계산된다.
의료업·수의업·약사업 사업자가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줄여 신고하면 수입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미리 채움' '기장 의무 및 경비율 안내' 등 간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사업장 현황 신고 기간 후 그 내용을 정밀 분석해 신고·과소 신고 여부를 검출할 예정이다. 기한 내 성실 신고해달라"고 했다.
신봉우기자



작년 노래방 개·폐업 역대 최악...코로나19로 매출 직격탄

개업, 전년대 반토막...폐업 13년래 최고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매출 감소 영향"

지난해 노래연습장 개업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명령'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상가정보연구소가 행정안전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작년 전국에서 개업한 노래연습장은 389곳으로, 1987년 관련 통계 집계 시작된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노래연습장 개업은 2016년 1424곳

을 정점으로 4년 연속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295곳 ▲2018년 774곳 ▲2019년 755곳 등 순이다. 특히 지난해는 전년 대비 48.5% 줄며 반토막이 났다.
폐업도 증가했다. 지난해 문을 닫은 노래연습장은 2137곳으로, 2007년(2460곳) 이후 13년만에 가장 많다.
시도별 폐업 수는 경기도가 524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369곳), 부산(163곳), 대구(141곳), 인천(113곳), 광

주(81곳), 울산(54곳), 대전(46곳) 등 순이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노래연습장은 밀폐된 공간이라는 인식이 있어 집합금지명령의 타격이 더 컸다"면서 "이 영향으로 노래연습장 개업은 감소하고 폐업은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합금지 명령이 18일부터 완화됐지만 여러 명의 사람이 함께 찾는 노래연습장 특성상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진열된 10~20만원대 설 명절 과일 선물세트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향상되면서 10~20만원대 선물이 잘 팔리고 있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 선물용 과일이 진열되어 있다. 한편 적무 관련성이 없는 일반인들끼리 주고받는 설 명절 선물은 가격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전남도, 설명절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할인행사

청탁금지법 선물한도 20만원까지 상향



전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선물 한도가 2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됨에 따라 설맞이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남도는 도가 직접 운영 중인 남도장터(해남)를 비롯해 해남미소, 보성물 등 시·군 온라인 쇼핑몰에 선물세트를 준비하고 설맞이 할인행사와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남도장터는 선물 한도 인상에 맞춰 한우, 전복, 굴비, 건강기능성 식품 등으로 구성된 49개 선물세트를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가격대로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품목별로 최고 76%까지 할인한다.

해남군이 직영 중인 해남미소는 도라지 정과, 한우, 황칠진액 등 20여 가지 제품을 선보이며, 품목당 최고 30%까지 할인 판매한다.
해남에서 생산한 쌀, 잡곡, 김, 다시마, 멸치, 함초 소금 등이 담긴 명품 푸리미 세트를 10만원, 15만원, 20만원의 가격으로 구성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보성군의 온라인 쇼핑몰인 보성물은 녹차, 한우, 흑염소 진액, 곰뱅이환 등 쇼핑몰 내 모든 제품을 품목에 상관없이 10% 할인해 준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도내 소재한 54개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한우와 더덕 등 농수특산

물로 구성된 10만원 이상의 푸짐한 설 선물세트도 마련했다.
수도권과 영남권 등 대도시에서도 전남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20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성남 소재 김스클럽 야탑점, 29일부터 2월10일까지 롯데백화점 부산 광복점, 29일부터 2월8일까지 신세계백화점 광주점에서 직거래장터를 개최해 판촉전을 벌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 중인 '대한민국 농향(농축산물 할인)감사' 행사와 연계해 28일부터 농축산물 추가 20% 할인행사(1인당 최대 1만원 지원)에도 나선다.
남도장터와 시·군 온라인몰, 대형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중소형마트 등에서 할인품목 구입 시 20% 할인을 지원하며, 전통시장에서는 30% 할인 행사가 펼쳐진다.
강종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수특산물 선물 한도액이 20만원으로 상향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농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이번 판촉이 판로를 확대하고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가능하다

관계기관 합동 '설 선물 보내기 캠페인' 전개

지난해 추석 선물 상한액 인상 매출 7% 증가



올해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14일까지 직부와 관련된 공직자 등도 한우와 생선, 홍삼 등 농축수산물(가공품 포함) 선물을 20만원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농어민·소상공인 단체장, 관련 업계 등이 국민권익위에 선물 가액 범위 상향을 요청했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를 조정한 것이다.
다만,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

와 신청인 등 직문 관련성이 있으면 선물이 허용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들이 받을 때만 적용된다.
국민권익위는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홍보할 계획이다.
또 해수부와 농식품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내달 10일까지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향감사' 설 특별전'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8000여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를 추진한다.
해수부도 전국의 오프라인 마트,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설 특별전'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

할 계획이다.
해수부와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때 일시적으로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올린 결과,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던 전년 추석보다 7% 증가했다.
문성혁 장관은 "농수산업계가 앞장서서 설 명절 선물보내기 운동을 활성화시켰다"며 "이번 설에는 코로나19로 고통을 찾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물로 대신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향후에도 청탁금지법 취지가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체 계급 등 수수 범위를 정확히 알리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농식품부·해수부 등의 관련 업종 지원 대책 추진 시 현장 의견 청취,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작년 주택 매매거래량, 127.9만 건...전년비 58.9%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127만9305건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58.9%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량도 14만281건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5% 늘었다.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량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64만2,628건으로 전년 대비 61.1% 증가했다. 서울은 17

만7757건으로 35.3% 늘었다.
지방도 63만6677건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56.7%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93만4078채로, 전년 대비 71.4% 증가했다.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거래량도 전년 대비 32.7% 증가한 34만5227채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한 해 서울·월세 거래량도 218만9631건으로

집계돼, 2019년 대비 12.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은 18만3230건으로,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시행 영향에도 전년 같은 달 대비 10.0% 증가했다.
월세 거래 비중은 40.5%로 전년(40.1%)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 서울은 40.4%에서 41.1%로 0.7%p 늘며 상대적 증가 폭이 더 컸다.